

# 보도자료

배포일 : 2025.10.16.(목)



□ 국민소통국 : ☎ 02-2630-0050 □ 담당 : 이주형 부장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한미일보 기사 작성자 2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10월 16일, 김현지 제1부속 실장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미일보의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이러한 악의적 언론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질서를 혼드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소통위원회에 따르면, 한미일보는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연이어 게재한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위원회는 “해당 기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의 적시’이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는, 결코 허위와 조작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라는 주장이 있다’,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문구 뒤에 숨어 익명의 소문을 반복

전파하며 사실상 허위의 확산범이 되었다.” 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간첩 의혹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제기하면서도 단 하나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며 “이것은 보도가 아니고 선동이며, 언론이 아닌 정치공작의 도구로 전락한 행위” 라고 강조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고발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사실과 진실 위에 서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다.”

위원회는 이어 “한미일보는 최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명된 스카이데일리 를 이끌던 인물들이 창간한 매체로, 그들의 보도행태는 과거 스카이데일리 시절의 왜곡과 허위보도를 답습하고 있다” 며 “이는 언론의 이름을 빌린 조작과 선동의 재현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 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허위조작정보와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이라며, “당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어떠한 왜곡과 조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으며,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고 밝혔다.

참고1.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전용기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포한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한미일보의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 언론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질서를 혼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10월 12일과 13일,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상대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어디에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의 적시’ 이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결코 허위와 조작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 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언론은 사실 확인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그 최소한의 원칙조차 저버렸습니다.

“~라는 주장이 있다”,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는 문구 뒤에 숨어, 익명의 소문을 반복 전파하며 사실상 허위의 확산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간첩 의혹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제기하면서도 단 한 줄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의도했습니다.

이것은 보도가 아니라 선동이며, 언론이 아닌 정치공작의 도구로 전락한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고발을 통해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는 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 비판과 건전한 언론 활동을 결코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가장한 모략, 거짓을 포장한 폭력은 결코 ‘표현의 자유’ 가 아닙니다.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을 위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사실과 진실 위에 서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입니다.

한미일보는 최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명된 스카이드에일리를 이끌

던 인물들이 창간한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보도 행태는 과거 스카이데일리 시절의 왜곡과 허위보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의 이름을 빌린 조작과 선동의 재현에 다름 아닙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허위조작정보와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어떤 왜곡과 조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진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참고2. [고발장 접수 및 기자회견 사진]

